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68.34	↑ 코스닥	782.05
	(+23.22)		(+9.21)
↓ 금리 (미국 9년)	3.949	↓ 환율 (원/달러)	1322.40
	(-0.030)		(-20.50)



생성형 AI 저작권 충돌 잇따라... 글로벌 규제 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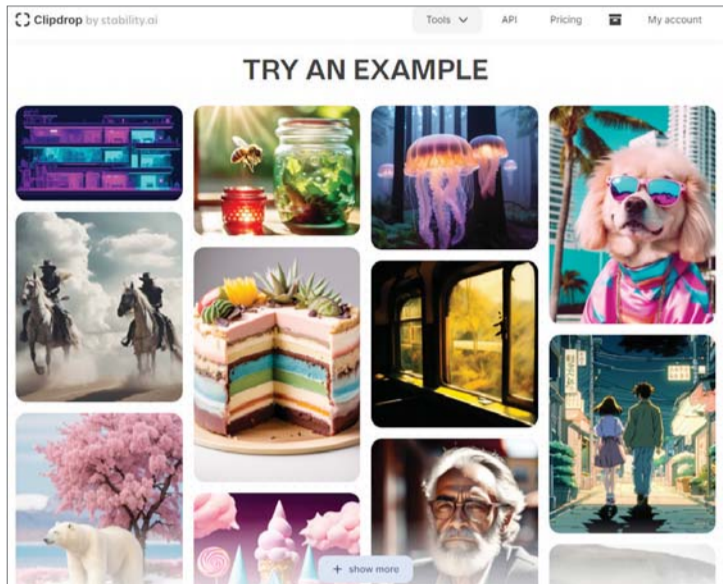
AI의 은밀한 비밀

〈上〉 저작권 소송

챗 GPT(chatGPT) 공개 1년. 인공지능(AI)에 세계가 뒤집혔다. 정해진 답을 어색한 문장으로 말하던 AI는 화면 너머 사람이라도 있듯 말하고, 문외한도 단어 몇 개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발전에 빛만 있으랴. AI에 화난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눈부신 AI 발전의 그늘, AI가 말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작품'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AI가 맛닥뜨리고 세계 어느 곳도 갈피를 못 잡은 '저작권'.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美 법원, AI 저작권 소송 기각 기밀성·방대함으로 확인 불가
바이든 AI안전 행정명령 서명 180일 내 권고안 마련 지시 국내서도 가이드라인 준비

인공지능(AI)의 대중화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를 학습할 때,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소스코드 저장소 '깃허브'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테빌리티AI 화면. 키워드 또는 문장을 토대로 이미지를 제작한다. /스테빌리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AI 훈련부터 개발, 생산,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저작권청장에 180일 이내 AI 학습 관련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창작물과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챗GPT(chatGPT) 이후 AI의 발전상황이 공유되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제

작 및 가짜 정보 확산이 가장 먼저 논란을 일으킨 후 AI 업계 밖까지 들썩이게 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AI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이 다양한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소송이 줄지어 이어졌다. 지난달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는 유니버설뮤직,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글로벌 음반사들은 앤스로픽이 비윤세, 롤링스톤즈 등 유명 가수 노래 500여 곡 가사를 학습에 무단 이용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의 요구에 클로드가 기존 노래 가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깃허브의 한 이용자 또한 M S, 오픈AI(OpenAI) 등에 "오

픈AI의 코텍스, 깃허브의 코파 일럿이 오픈소스의 코드를 훔쳤다"며 소송에 나섰다. AI로 제안되는 코드가 공개된 깃허브의 동일한 코드 문자열로 구성되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상 첫 AI 학습에 관한 저작권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만화·일러스트레이터 3인(사라 앤더슨·캘리 맥커넌·칼라 오티즈)가 스테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작가 3인은 자신들의 저작물 중 일부가 이미지 생성형 AI 데이터셋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각 프로그램이 원본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작가들이 제시한 작품 중 대다수가 저작권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생성형 AI의 데이터셋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기각한 윌리엄 오릭 판사는 "스테빌리티AI의 '스테이بل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기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있는 출력물을 내놓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계 DX, 혁신의 트리거 생존·ESG 경영 필수 과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보고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 강연 :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전종목 공매도 전면금지”

금감원, 20명 규모 특조단 출범 “불법 공매도에 시장안정 저해 약 10개 글로벌 IB 전수 조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가운데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면서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비롯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

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7월 말 이후 이달 3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0%, 16.4% 하락했

다. 미국(S&P500 -5%)이나 유럽(유로스톡스 -6.6%), 일본(니케이225 -3.7%) 등 해외 주요 증시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추진한다.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과 공매도 과열종목제도 개편 등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간차입조건 등이다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출범한다”며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당, '공매도 한시 금지' 한목소리... 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사진 뉴스스
-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압축

- ▲ 국민의힘, '지역 필수'로 혁신 TF' 발족... 6일 첫 회의
- ▲ 해외연수 취소 '충북도의회, 예산반납 앞두고 유럽연수 확정



- ▲ 민주당 김포 의원들 “교통이 먼저...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돼” /사진 뉴스스
- ▲ 육·해·공 헬기 물갈이한다... 신형 훈련헬기 '벨 505' 40년 만에 도입